

출판물의 선정 주체

독서의 풍속사 — 8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시대 출판·인쇄의 대상을 정하는 결정권자는 주로 왕이었다. 중종 이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인쇄·출판을 결정하는 권리가 관료들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조선시대의 출판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서적을 인쇄·출판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출판·인쇄기관인 주자소와 도서관은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국가가 인쇄·출판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실로 체제의 이익에 벗어나는 책이 인쇄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책은 곧 지식이다. 따라서 어떤 책을 출판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보급하느냐 하는 문제와 통한다. 좌파의 서적이 대량 출판된다는 것은 좌파의 사상을 대량 공급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서 출판 대상을 결정하는가? 현대의 출판사는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출판물을 선정하는 주체는 출판사며, 그 중요한 기준은 이익이다. 하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웅색할 수도 있다. 인간은 기묘한 구석이 많은 존재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아도, 아니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책을 출판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법이다. 어쨌거나 출판물을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며, 또 출판물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출판의 역사에서 꼭 중요한 문제다. 조선시대의 출판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가?

주로 왕이 인쇄와 출판의 대상 결정해

주자소, 도서관 등은 국가의 출판기관이다. 이 국가기관에서 출판할 책을 누가 선정하는 것인가? 곧 출판물 선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다음의 두 예를 보자.

(1) 이에 앞서 임금께서 학자들이 역사에 어두움을 염려하여 이미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하게 하였고, 또 초학자들이 표장(表章)을 고루 보지 못함을 염려하여 증선지(曾先之)의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를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주석하게 하였으나, 원나라 시대만이 빠졌으므로 임강(臨江) 장미화(張美和)의 시로 보충했으며, 우리나라의 연대도 역시 몰라서는 아니되므로, 이조 판서 권도(權蹈)에게 명하여 편찬하고 주해까지 하게 하였는데, 편질(篇帙)이

비록 간단하나 개벽한 이래로 국운(國運)의 장단과 국세(國勢)의 이합(離合)의 본말을 대략 한눈에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주자소로 하여금 박아내게 하여 대소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세종실록》 18년 4월 4일).

(2) 경연(經筵)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어(國語)》와 《음의(音義)》 한 본(本)이 탈락된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중국에 구하여 별본(別本)을 얻었으나, 빠진 것이 오히려 많고 주해(註解)가 또 소략하였다. 일 본에 구하여 또 상세한 것과 소략한 것 두 본(本), 보음(補音) 세 권을 얻어왔으나 역시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에 집현전에 명하여 경연에 소장된 구본(舊本)을 위주로 하고, 여러 본(本)을 참고하여 잘못을 바로 잡고 빠진 것을 보충하고, 음의(音義)와 보음을 가지고 번잡한 것을 깎고 절목 아래에 나누어 넣고, 그래도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운서(韻書)를 가지고 보충하여, 드디어 주자소에 명하여 인쇄하여 널리 퍼내게 하였다(《세종실록》 22년 6월 26일).

세종 때의 《실록》 자료인데, 이것은 순전히 왕이 주체가 돼 인쇄·출판 대상을 선정해 명령한 것이다. 즉 인쇄·출판의 대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왕이다.

신하·관청이 출판 요청해 왕이 허락하기도

이와는 다른 스타일도 있다. 특정한 관청에서 책의 인쇄를 요청해 왕이 허락하는 경우다. 예컨대 세종 5년 6월 23일 사역원은 예조를 통해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전후한서(前後漢書)》《직해효경(直解孝經)》 등의 인쇄를 요청해 왕의 허락을 받고 있으며, 세종 5년 10월 3일 승문원은 《지정조격(至正條格)》《이학지남(吏學指南)》《어제대고(御製大誥)》의 인쇄를 요청해 허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역원과 승문원이란 관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서적의 인쇄를 요청해 허락받은 경우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서적은 왕의 측근에 있는 고급관료들의 요청을 왕이 허락하는 형식으로 인쇄·출판된다. 다음 예를 보자.

관부사 허조가 아뢰기를,

《효경(孝經)》과 《소학(小學)》은 모두 처음 배우는 자가 마땅히 먼저 습득할 책이오나, 다만 《소학》은 과거볼 때에 강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모두 마지 못하여 이를 읽사옵고, 《효경》은 세상의 초학(初學)들이 전혀 읽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경연에서 자구(字句)를 풀이한 《효경》을 내다가 간행하여 초학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좌대언 허성(許誠)에게 명하기를,

“주자소로 하여금 2백 50질을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11년 3월 22일).

신하가 요청하고, 왕이 허락해 주자소에서 인쇄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런 경우가 주자소와 교서관에서 책을 인쇄·출판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우다.

주자소와 교서관은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왕명으로 출판됐다. 그런데 여기에도 미묘한 차이는 있다. 출판의 명목상 결정자는 왕이지만, 출판 대상 서적의 선정 주체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들었던 예 (1), (2)는 세종이 직접 출판 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이 경우가 주류는 아니었다. 이 경우는 왕권이 강력하거나 국왕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예컨대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은 왕권이 강력했고, 또 국왕 자신이 당대의 일류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조선전기 인쇄 출판문화의 기본틀을 짚던 세종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학자였던 것이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왕이 출판 대상 서적을 선정했던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종조 이후 관료가 출판대상 선정 주도해

그러나 중종조 이후 출판 대상 선정의 실제적 주도자는 관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안국(金安國)을 예로 들어보자. 김안국은 <부경사신수매서책인반의(赴京使臣收買書冊印頒議)>란 글을 남기고 있는데, 풀이하면 '중국에 갔던 사신이 구입한 서적의 인쇄에 대한 의견'이란 뜻이 되겠다. 즉 중국에 갔던 사신이 대량 구입했던 책 가운데 어떤 책을 몇 부나 인쇄할 것



세종은 조선전기 인쇄출판문화의 기본틀을 짚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학자였다. 그는 출판대상 서적을 직접 선정했다. 사진은 세종의 영정.

인가를 중종이 김안국에게 물었던 것이고, 김안국은 이에 대해 의견을 올렸던 것이다. 책은 모두 15종이다. 김안국은 각각의 책에 대해 3~4부를 찍을 것, 5~6부를 찍을 것, 다수 인쇄할 것 등을 구분해 답하고 있다.

김안국의 의견이 그대로 실행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중종 스스로가 책에 대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경우는 출판 대상 선정을 왕이 관료에게 의뢰하고 있는 적실한 예가 된다. 사실 <중종실록>의 출판 관계 기사를 훑어보면, 이 시기에 국가의 출판을 주도한 것은 관료였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사람 출신의 관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관료들의 요청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요청을 허락하는 것이 통례였다. 다만 인쇄 부수는 여전

“주자소와 교서관은 인쇄 출판기관이었지만, 스스로 출판할 서적을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출판 서적을 선정하는 것은 왕과 관료들의 몫이었으며, 주자소 교서관은 그것의 인쇄 과정을 담당했을 뿐이었다. 물론 출판 대상 서적을 왕이 선정하건 관료가 선정하건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어느 쪽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서적을 인쇄 출판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히 왕이 결정하고 있었다.

주자소와 교서관은 인쇄 출판기관이었지만, 스스로 출판할 서적을 선정한 것은 아니었다. 출판 서적을 선정하는 것은 왕과 관료들의 몫이었으며, 주자소 교서관은 그것의 인쇄 과정을 담당했을 뿐이었다. 물론 출판 대상 서적을 왕이 선정하건 관료가 선정하건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어느 쪽도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서적을 인쇄 출판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지배체제의 영원한 존속을 위한 서적을 출판한다는 것은 이미 묵계된 사항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조의 이념적 지주였던 유가의 경전과 유가의 이념에 벗어나지 않는 중국의 역사·문학 서적들이 대량 인쇄됐다. 이것을 벗어날 경우 혹독한 비판이 뒤따랐다. 성종 24년 경상도 감사 이극돈(李克墩)은 <태평통재(太平通載)>와 같은 전기소설집(傳奇小說集)과 <파란집(破閑集)> 같은 시화(詩話)를 찍었다가 혹독한 비판을 받고 사과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인쇄·출판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실로 체제의 이익에 벗어나는 책은 인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출판의 자유?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슬프구나! ■

세종시대의 인쇄 출판

조선 초기부터 도서 출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유는 유교적 교화 때문이었다. 이 때 조선의 국시였던 유학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해 많은 국력을 기울여 활자를 주조했고 도서를 출판했으며 교육제도를 보강했다. 그리고 경향 각지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비했다.

세종 때는 동활자의 인쇄기능을 개량해 활자인쇄를 보편화시키기에 힘썼으며 가능한 한 모든 서적을 주자로 인쇄해 보급하고자 했다. 세종의 업적은 종이의 생산 노력에서도 잘 나타난다. 관청에 종이 생산 공장을 두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관용지를 만들게 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인 수준이었던 고려 초지(抄紙)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종이 원료 생산 장려시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관청에서 간행하는 도서들을 읽는 독자층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도서출판물의 성격이 유교적이었으므로 당대 유신들의 취향에 적합한 도서들이 일반대중에게는 보편화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한국의 출판문화 변천사>>(백운관 외, 타래)에서).